

	<p>독 일 ( 프 랑 크 푸 르 트 ) 사 무 소</p> <p><b>해 외 동 향 보 고 서</b></p>	작성팀	마케팅지원팀
		담당자	정 훈 희 소장
		일 시	2 0 2 4 . 6 .

### CEPA Insight

- 유럽의회 내 극우 정치그룹 입지 확대에 따른 자국 보호 기조 강화 전망
- 식음료 분야 일회용·플라스틱 포장재 규제 강화에 맞춘 수출 대응 필요

## 1 제10대 유럽의회 선거(6.6일~9일) 결과 및 영향

- 유럽의회 투표(6.6~9일) 결과, 중도우파 정치그룹이 과반을 달성한 가운데, 프랑스, 이탈리아 등 주요 국가에서 극우(Far-right) 정치그룹 약진 부각
  - 총 720석 중 EPP(중도우파)가 184석(25.6%)으로 제1정치그룹 지위 유지, S&D(중도좌파) 139석(19.3%), Renew(중도 자유주의) 80석(11.1%) 순
- 독일의 극우정당인 AfD당 또한 중도 우파 정당인 기독교민주당(CSU)의 30.2%에 이어 역대 최고 선거 결과인 15.9% 기록
  - 특히, 16~24세 젊은 유권자층에서 CDU/CSU와 함께 공동 1위를 차지
- 유럽의회 내 정치지형 변화로 산업과 경제 전반에도 변화 전망
  - (산업) 극우 정치그룹은 그린딜 정책 추진에 반대하는 농가 및 기업을 대변하고 있어, 향후 관련 법안의 추진에 속도 조절 및 변동 예상
  - (경제) EU 회의론적 입장을 견지하고 국내 산업보호주의 등 개별국 중심의 정책기조를 강조, EU 단일시장 경쟁력 강화에 부정적 영향 가능

※ 출처 : European Parliament (<https://www.europarl.europa.eu/news/en>)

## 2 솔츠 총리, 난민 중범죄자 대상 강제귀국 조치 재개 의지 표명

- 솔츠 연방 총리(사민당)는 6. 6. 국가안전·안보 관련 연방하원 연설에서, 아프가니스탄·시리아 중범죄자 및 범죄위험자의 강제귀국 조치 재개 의지 표명
  - 이는 지난 5. 31. 만하임 반이슬람단체 행사에서 아프가니스탄 출신 남성의 흉기에 의해 남성 경찰관이 사망한 사건에 대한 강경한 대응을 의미하며
  - 강제귀국 조치에 찬성하는 사민당·자민당과, 이에 반대하는 녹색당 간의

- 충돌이 예상되자, 솔츠 총리가 직접 나서서 강제송환 재개 의지를 천명
-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'12년 시리아 내전 상황을 고려해 동 국가 출신자의 강제송환 중단을 결정했고, 아프가니스탄 국적자들도 탈레반의 정권 장악 후인 '22년부터 불안한 국내 상황을 이유로 강제귀국 조치 잠정 제외
  - 최근 만하임 테러 사건 발생 후 여야를 막론, 이들 국가 출신 중범죄자 및 잠재적 테러리스트에 대하여 강제송환시켜야 한다는 여론 대두

※ 출처 : SWR (<https://www.swr.de/swraktuell/baden-wuerttemberg/mannheim/messerangriff-mannheim-polizist-scholz-messerverbot-abschiebungen-demonstrationen-afd-100.html>)

### **[3] 재생형 수소 바이오디젤 HVO100, 주유소 판매 허용**

- 5. 29.부터 합성 디젤인 HVO100의 주유소 판매가 허용, 독일자동차클럽 ADAC는 동 연료가 주유소에 점진적으로 도입될 것으로 기대
  - HVO는 수소 처리된 식물성 기름을 의미하는 것으로, 동 디젤은 식물성 기름, 식물성 및 동물성 지방 혹은 그 폐기물로부터 생산되어 기존 디젤과 비교 시 CO2 배출이 최대 90%까지 낮음
  - HVO 디젤은 탄소세 미부과되나 기존 디젤보다 생산단가가 높아 가격 더 높음
- 독일주유소광물거래협회(BFT)는 소비자가 기후친화적인 디젤을 주유할 수 있게 되었다고 환영하면서도, 허가까지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렸다고 비판

※ 출처 : Tagesschau  
(<https://www.tagesschau.de/wirtschaft/verbraucher/diesel-hvo100-tankstellen-100.html>)

### **[4] 가정용 천연가스 가격, 러우사태 이전 대비 +84% 상승**

- 가정용 천연가스 가격이 상승하며, 러우사태 이전에 비해 84%까지 상승
    - 연간 천연가스 소비량이 20,000kWh인 가구는 연간 2,324유로를 지출
    - 난방유의 경우, 연간 2,000리터 소비 가구는 연평균 2,076유로를 지출하며 이는 러우사태 이전 대비 +69%
  - 천연가스 가격 증가는 CO2 가격과 가스망 요금의 동반 상승에 기인
    - 저렴한 러시아 가스 공급 중단에 더해, 독일 CO2 가격도 상승\*
- \* CO2 가격은 55유로/톤('25년) → 65유로/톤('26년)까지 상승 예상

※ 출처 : Spiegel (<https://www.spiegel.de/wirtschaft/energiepreise-erdgas-fuer-haushalte-84-prozent-teurer-als-vor-der-krise-a-658bf319-e85b-4026-af30-43c703ff838>)

## 5 음료 등 포장재법 강화 시행 동향

- 독일은 '21년 7월 포장재법을 개정해 포장 등록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, 일회용품 및 플라스틱 사용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정책 추진 중
  - '22년 1월 1일, 음료수병 회수 의무화(Pfandpflicht, 보증금제)
  - '23년 1월 1일, 케이터링, 카페, 비스트로(Bistro), 구내식당(Kantine), 배달 서비스·레스토랑 대상 재사용 가능 포장재(Mehrwegpflicht) 제공의무 시행
  - '24년 1월, 음료수병 회수 의무화가 우유 및 유제품 플라스틱병으로 확대, 일회용 플라스틱 음료병 유제품에는 25ct의 보증금 추가 부과
- 아울러, 오는 7월 3일부터는 최대 3리터(L) 용량의 전체 또는 일부가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일회용 음료 포장 뚜껑에는 테더 캡(Tethered Caps), 병과 분리할 수 없는 뚜껑이 달린 페트병 제공 의무
  - 뚜껑 일체형 페트병은 독일 내 음료기업에서 이미 사용되고 있음
- 더 나아가 '25년 1월 1일과 '30년 1월 1일에는 일회용 PET병 생산 시 재활용 플라스틱 최소 사용 의무화, 재활용률 각각 25% 및 30% 적용

※ 출처 : Plasticker (<https://plasticker.de/news/shownews.php?nr=40691&nid=28823.w.h.2022-02-10>)

## 6 독일, 농업 분야까지 디지털화 가속

- 최근 독일 농업협회(DLG)가 500개 농장 대상 설문조사 결과, 응답자의 47%가 AI 도입 검토 중이며 38%는 세부논의 시작, 10%는 도입 완료 상태
  - 특히, 99헥타르 이상 대규모 농장의 경우 52%가 AI 도입 완료했거나 고려 중
- 주된 도입 목적은 자원 절감(91%), 효율성 제고(61%), 신체적 부담 감소(57%) 등
- 가장 활발히 도입된 분야는 GPS내장 농기계(69%), 디지털 농지 기록 시스템(68%)
- 다만, 높은 투자비용(75%)과 행정 처리(61%), 표준화 미비(34%) 등으로 DX(Digital Transformation) 도입 장벽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분석

※ 출처 : Bitkom (<https://www.bitkom.org/Presse/Presseinformation/Stall-bis-Feld-Agrarbetrieb-Kuenstliche-Intelligen>)